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108
----------	-------

발의연월일 : 2022. 8. 31.

발 의 자 : 이장섭 · 송갑석 · 홍성국  
김영배 · 양정숙 · 신정훈  
최혜영 · 한병도 · 이학영  
이병훈 · 박광온 · 유정주  
임호선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류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어 경형자동차 소유자, 택시 운송사업자, 주한외교관 등 법에서 정하는 자가 소비하는 자동차 연료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액 등의 일정금액을 감면 또는 환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국제 유가공급망이 불안정해지고 유류가격이 급등하여 정부가 유류세 탄력세율을 최대한도까지 인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하분이 최종소비자에게 그대로 반영되지 않아 국민이 체감하는 고물가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이에 경기 조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구매한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일

정 금액을 환급하여 민생경제를 안정시키려는 것임(안 제111조의7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1조의7(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에 관한 특례) ①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유류(이하 이 조에서 “유류”라 한다)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유가변동에 따른 경기 조절, 가격 안정 등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해당 유류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중 제2항에 따른 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환급하며, 연간 환급 한도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휘발유 또는 경유의 경우: 리터당 200원의 개별소비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에 따른 석유가스 중 부탄의 경우: 킬로그램당 150원의 개별소비세

③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

급대상자”라 한다)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로부터 환급을 위한 유류구매카드(이하 이 조에서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신용카드업자로부터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④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환급대상자가 그 카드로 유류를 구입하면 신용카드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유류에 대하여 세액 환급을 신청하여 제2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환급받거나 그 신용카드업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⑤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환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신용카드업자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환급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을 징수한다.

1.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유류의 환급세액
2. 제1호에 따른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⑦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는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

인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양도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환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⑧ 제4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은 신용카드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환급받거나 공제받은 경우에는 과다환급세액과 과다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을 징수한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6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환급세액과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을 징수한다.

1. 환급대상자로부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한 경우
2. 환급대상자가 아닌 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3.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환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이후에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⑩ 국세청장은 환급대상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⑪ 제1항을 적용받는 자에 대해서는 제111조의2부터 제111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급 및 징수절차, 제출서

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의  
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  
드를 통하여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lt;신 설&gt;</u></p>	<p><u>제111조의7(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에 관한 특례)</u></p> <p><u>①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유류(이하 이 조에서 “유류”라 한다)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유가변동에 따른 경기 조절, 가격 안정 등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해당 유류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중 제2항에 따른 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u></p> <p><u>② 제1항에 따른 환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환급하며, 연간 환급 한도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u>1.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u></p>

항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휘발유 또는 경유의 경우: 리  
터당 200원의 개별소비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  
항제4호바목에 따른 석유가  
스 중 부탄의 경우: 킬로그램  
당 150원의 개별소비세

③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  
서 “환급대상자”라 한다)는 국  
세청장이 지정하는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  
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로  
부터 환급을 위한 유류구매카  
드(이하 이 조에서 “환급용 유  
류구매카드”라 한다)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신용카드업자로부터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한  
다.

④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  
급받은 환급대상자가 그 카드  
로 유류를 구입하면 신용카드  
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



당 유류에 대하여 세액 환급을 신청하여 제2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환급받거나 그 신용카드업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⑤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환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신용카드업자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환급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을 징수한다.

1.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유류의 환급세액
2. 제1호에 따른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⑦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는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양도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환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⑧ 제4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은 신용카드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환급받거나 공제받은 경우에는 과다환급세액과 과다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을 징수한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6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환급세액과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을 징수한다.

1. 환급대상자로부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하여 사용

	<p><u>한 경우</u></p> <p>2. <u>환급대상자가 아닌 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u></p> <p>3. <u>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환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이후에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u></p> <p>⑩ <u>국세청장은 환급대상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p> <p>⑪ <u>제1항을 적용받는 자에 대해서는 제111조의2부터 제111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한다.</u></p> <p>⑫ <u>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급 및 징수절차, 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	--